내달 가계대출 추가대책 예고… 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잔액 702조
차주별 DSR 적용일정 재조정 고려
전세자금 대출규제 미포함 가능성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대출규제 추가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개인대출 상담창구. /뉴시스

금융당국이 10월 중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추가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추가대책으로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시행 일정을 앞당기고, 제2금융권의 DSR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월 중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9월 가계대출 동향을 보고 가계대출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시중은행의 가계대출잔액은 지난 16일 기준 701조5680억원이다. 지난해 말(670조1539억원)과 비교해 4.69% 증가한 규모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대출 포함)은 495조2868억원으로 전년(473조7849억원) 대비 4.54% 늘었다. 신용대출은 141조7005억원으로 같은 기간 6.02%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 권고치에 근접한 만큼 추가 대책 마련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DSR 적용 일정 앞당기나

가장 유력한 추가대책으로는 차주별 DSR 적용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의 합계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금융위는 올해 7월부터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차주별로 DSR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3억원 초과 차주,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차주를 대상으로 도입할 규제를 앞당겨 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2금융권을 대상으로 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2금융권에 적용되는 차주별 DSR은 60%로 은행권(40%)에 비해 높다. 올해 들어 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5조3000억원 증가했다. 전년(2조4000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2금융권으로 가계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다.

차주별 DSR 규제 대상에 카드론을 포함하는 시기 또한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상반기 여신금융의 마이너스카드론 대출잔액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15.5% 증가했다. 카드사의 DSR산정시스템 구축 시기에 맞춰 이르면 올해말 DSR규제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수요자 '전세대출' 규제…가능성 낮아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추가대책에 전세자금 대출규제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앞서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의 하나로 전세대출규제 검토와 관련해 정해진 바 없다"며 "전세대출의 경우 실수요자가 많으니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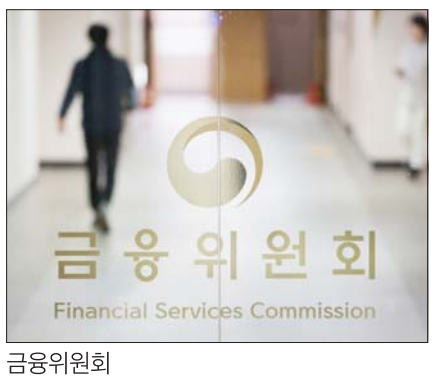
실제로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중 98%는 집주인계좌에 대출금이 직접 입금되는 실수요 전세자금대출이다. 올해 늘어난 가계대출의 약 70%가 주택담보대출, 그중 절반이 전세자금대출이다. 전세자금 대출의 추가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실수요자가 이용하고 있는만큼 대출 중단 등 극단적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은행을 통해 전세대출 심사가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자금을 직접 부담할 수 있는 차주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없도록 소유재산 등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할 것"이라며 "규제가 없더라도 다른 은행보다 대출규제가 느슨하면 풍선효과로 대출수요가 더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대출문턱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금소법 계도기간 내일 종료… 위반시 제재

올해 말까지 보완기간 부여
금융위, 설명서 개편 지체 판단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이 오는 24일 종료됨에 따라 25일부터 규제위반 적발시 본격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투자 설명서 개편 및 대출모집인 등록과 관련해선 올해 말까지 보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 운영 경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금소법은 각 금융관계법령에 산재돼 있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하나의 법률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금소법 계도기간 동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협회는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권역별 표준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권역별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투자성 상품 설명서 개편이 지체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품설명시간을 약 60% 줄여야 하지만 아직까지 상품설명시간이 과도하고, 상품설명서 내 적합성 원칙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소법 시행전부터 영업해왔던 대출모집인(중소법인·개인), 리스·할부 모집인 등록 또한 지체되고 있다. 등록요건중 결격사유 확인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협회에서 관리되지 않던 리스·할부모집인의 등록신청이 늦어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 올해 말까지 보완기간을 부여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회사의 금소법 이행상황 자체점검과 자율시정을 유도해 나가겠다"며 "금융회사에는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모집인은 금소법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설명회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판 키우는 빅테크·핀테크… 인재 영입 활발

1개월 유급휴가 등 파격 조건

빅테크와 핀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채용공고를 내고 있다. 비대면 혁신금융이 확대되자 시중은행의 채용규모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빅테크·핀테크 업계의 채용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는 엔지니어링, 데이터, 인프라, 보안, 디자인 등 37개 분야에서 100여명의 인재를 채용한다.

토스는 지난 2017년 말 기준 120명이었지만 이달 기준 1260명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9개월간 토스 커뮤니티에서 700명이 넘는 인력이 채용됐다.

특히 토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인재를 영입하고 있다.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사이 출범 예정인 토스뱅크는 지난 7월 직전 연봉의 최대 1.5배와 기존 팀원과 차등 없는 스톡옵션 제공 등을 제시하며 대규모 채용을 진행했다.

카카오뱅크도 지난 7월 두자릿수의 3년 이하 개발자 공채를 진행했다. 만 3년 근속시 1개월의 유급휴가에 200만원의 휴가비를 별도로 제공하고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등의 혜택을 내걸었다. 카카오페이는 이달 초 첫 비기술 대상 직군(프로덕트 매니저) 공채 공고를 냈다.

자산관리 앱 뱅크샐러드는 업계 최고 수준의 연봉과 최소 1억원의 스톡옵션을 약속하며 리드급 개발자 채용에 나섰다. 대출중개 핀테크 핀다의 기술개발 및 데이터 조직은 1년새 3배 이상 늘었다. 삼성과 롯데 같은 대기업을 비롯해 쿠팡,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에서도 인재를 영입했다. 지난달엔 최성호 전 네이버 부사장을 기술전략 자문위원으로 영입했다.

/나유리 기자

중국정부 '질서있는 디폴트'에도 "충격 상당할 것"

›› 1면 '헝다그룹 사태'서 계속

무질서한 디폴트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 뿐만 아니라 대규모 선분양 물량과 직·간접 고용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부동산 시장 충격과 사회불안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

유력 시나리오는 중국정부가 관여하는 '질서있는 디폴트'다.

국제금융센터 주혜원 책임연구원은 "중국정부가 직접적인 금융지원에 나서지는 않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디폴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에는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공급·시공사와의 협상 등을 통해 건설공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위한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질서있는 청산 또는 회생을 도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 연구원은 또 "헝다의 '질서있는 디폴트'가 이뤄지는 경우에도 역내외 부채 규모를 감안할 때 그 충격은 상당할 전망"이라며 "여기에 최근 중국의 경제활동 둔화와 기업규제 이슈로 인해 중국발 리스크가 장기화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헝다그룹의 주식과 채권은 모두 급락한 상태다.

홍콩 증시에 헝다그룹 주가는 지난 16일 2.62홍콩달러로 하락세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올해 1월 25일 16.82홍콩달러 대비 84%나 하락했다.

내년 3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달러화 표시 채권의 가격은 현재 29센트로 70% 가량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헝다 및 자회사 텐허 그룹의 달러화, 위안화, 홍콩달러화 채권 가운데 올해 말까지 갚아야 할 이자만 총 7억달러다. 당장 23일에 헝다는 8353만달러, 텐허는 3600만달러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지만 가능성은 낮다. /안상미 기자 smahn1@

우리銀, '기업승계 TAX컨설팅' 제공

기업승계 수요 반영

우리은행은 증가하는 기업승계 수요를 반영해 각 분야 전문가를 한 팀으로 구성해 '기업승계 TAX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우리은행 'TAX컨설팅센터'는 기업승계를 위해 필수적인 세금 업무를 기본으로 회계와 재무 분야까지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승계 외에 매각 및 청산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 고객에게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승계 TAX컨설팅은 대면 상담뿐 아니라 화상 상담시스템을 이용해 기업이 원하는 공간에서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우리WON뱅킹과 인터넷뱅킹으로 신청 및 예약이 가능하며 비용은 무료이다. 또한 컨설팅 서비스와 함께 기업승계를 주제로 세미나 개최 및 차세대 기업인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업승계를 고민하는 기업들에 필요한 서비스를 다방면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업승계 TAX컨설팅 '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앞으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